

“5·18 왜곡 처벌 특별법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

21대 국회 출범...광주시·전남도 해결 시급한 현안사업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해결될 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군 공항 이전 신속 추진 등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사안을 비롯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의대 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요 현안 그리고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를 설명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광주, 역사 바로 세우기 법률 제정 요구=광주시는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고 첫 번째로 요구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도록 일부 극우 세력들의 왜곡·편향에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5·18 정신이 훼손되고,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사회가 더는 상처받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도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서구 화정동 옛 국군 광주병원내 국비 70억원을 들여 피해자들을 돌보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광주 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쌓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올해 설계용역비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에 협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군공항 이전 조속 해결 요청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의대·한전공대 특별법 기대

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또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여당인 민주당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광주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국회 상임위원 국방위 지원을 통해 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되고,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뒷받침, 인공지능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원,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광주 설립 등도 광주시가 21대 국회와 협력해 풀어야 할 지역 현안 사업들로 꼽히고 있다.

◇전남, 방사광가속기 추가 및 의대 유치 등 요청=전남도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개정사업이 시급한 법령·제도와 지역 중요 현안, 국고 건의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전 농림부 장관) 국회의원을 비롯 신정훈, 김승남, 김원익, 주철현, 김희재, 소병철, 서동용, 윤재갑 당선인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9일로 임기를 다한 제20대 국회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이개호 국회의원에서 오랜 SOC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국고예산 7조원 시대를 열도록 앞장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공모 결과가 아쉽지만 당선인들이 큰 힘을 모아준 덕분에 호남의 저력을 보여준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에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지사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사안을 비롯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요 현안,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를 설명했다.

'법·제도 마련이 필요 사업'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건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국립 섬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핵심 기반시설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총 8건이다.

'중요 현안'으로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국립 의과대학 설립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대구포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혁신공항 조기 건설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총 8건을 설명했다.

'내년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남 산단 대개조사사업 국비지원 등 총 28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들은 다년간의 행정 관록과 시민사회 활동 경험 등 탁월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량을 갖추셨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하고 민생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부 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잇따른 면담을 통해 ▲광양항 활성화 기반구축 ▲목포항 국제가페리 건설 ▲스마트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확보를 약속받는 등 중요 현안 해결과 국고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권익 기자 cki@/연합뉴스 기자 chadol@kwangju.co.kr

두 호남출신 모두 강력 후보될 듯 대권가도 이낙연 질주에 정세균 꿈틀

호남판 남북대결 성사 관심

여권 내에서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와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 현 총리의 대권 경쟁 시나리오가 부상,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이낙연 전 총리가 8월 정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당내의 정세균(SK) 그룹이 점차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리는 현재 여야 잠룡들 가운데 지지율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전대를 앞두고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고 대세론을 기반으로 당내 '이낙연 계'를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평가 우량주'로 평가받는 정세균은 당내 기반에서 이 전 총리를 앞선다는 평가다. 과거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형성된 SK계 의원 수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40여명까지 늘어났다는 평가도 있다. 이들은 '광화문포럼'이라는 이름 아래 이르면 6월 중 결속식 몰려나 21대 국회는 정세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세균은 오는 9일 민주당, 12일 미래통합당 순으로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한다. 현직 총리라는 강점을 활용해 정치권과 점점 더 넓혀나갈 계획으로 보인다.

'남북대결'의 승패는 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지에 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두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문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문 대통령 내외의 표를 받고 당선된 이낙연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정 총리는 "지난 3년은 문 대통령의 위극극 리더십이 빛난 시기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이 전 총리는 전대 출마를 전후로 한 당내 리더십 구축이,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대권가도의 기본 전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정 총리는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인 내년 5월 전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링에 뛰어들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 지지율이 낮다고 정 총리를 쉽게 바서는 안 된다"며 "총리직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경선에 뛰어들 경우, 전북의 지지를 받으면서 호남 표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데다 당내의 튼튼한 지지 기반을 토대로 상당한 경쟁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 위기 극복 3차 추경·공수처 설치 등 난제 산적

21대국회 개원 전망과 과제

21대 국회가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지난 20대 국회와는 달리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교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속에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를 협치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엄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첫 단추 격인 원 구성 협상은 물론 국회 개원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 개원하고, 의정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8일인데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요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구성과 관련, "민주당이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원래 야당일 때 주장하는 선 정도만 들어주면 원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일방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가 문을 열되라

도 풀어야 할 현안이 접점산중이다.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계획중이다. 반면,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차질 없는 출

범을 직접 당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임명 문제와 각종 개혁 입법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격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 극복의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 21대 국회는 정세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